

# 전남광주 첫 시정질문서 조직개편·균형발전 놓고 공방

민형배 시장, 의회 경시 논란에 김문수 의원과 설전

농어촌 예산·항만공사 통합·공공기관 유치 등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시정질문에서 조직개편과 농어촌 예산, 제도 개선, 항만공사 통합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공공기관 이전과 주요 시설 입지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며 균형발전과 지역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에 따르면 이날 무안청사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문수·강정일·박필순·최명수·윤명희·이현명·정희선·서영배 의원이 차례로 시장·교육행정 질문에 나섰다.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김문수 의원은 민형배 시

장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집행부 업무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민형배 시장이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집행기관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며 “윤석열처럼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민 시장은 “그 비유는 매우 유감이다. 여기서 윤석열이 왜 나오느냐”며 “김 의원의 해석이 매우 특이하다 생각한다. 의회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직개편안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거나 가권한 것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소통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고, 민 시장은 조직개편을 둘러싼 이견을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농어촌 예산 확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내년도 농수축산업 예산을 최소 2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별기금도 매년 2000억원 이상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민 시장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정일 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옛 광주와 전남의 공모연수 기간이 각각 1년과 6개월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모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며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했다. 민 시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항만별 특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통합에 신중해야 한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본사를 광양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시장은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겠다며, 통합 본사 광양 유치를 위한 전담반이나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필순 의원은 광산구·북구·장성군·담양군을 잇는 철도권을 전남광주 제1호 광역생활권으로 지정 하겠다고 제안했다. 민 시장은 광역생활권 지정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위와 실행 방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점검과 집행부와 의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최명수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다른

혁신도시보다 2~4배 많은 기관 유치를 요구했다. 민 시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나주혁신도시 집중 배치 요구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혁신도시로 집중하는 것은 부조리한 것 같다”고 답했다. 윤명희 의원은 전남기록원·통합소방본부의 장흥 배치를 요구했으며, 민 시장은 기존 장흥 예정지를 포함해 광주 지역 기록 수요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입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현명 의원은 전북 불복 양식시설 정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확대를, 정희선 의원은 순천신대·선월지구 고교 신설과 통학 여건 개선을, 서영배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체계 정비와 광양항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질의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첫 시장·교육행정 질문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진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서구,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교육현안 논의 김이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12일 서부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서부교육발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남부 해양수도권 ‘전남’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전략 돼야”

문금주 의원 밝혀…부울경 중심 설계 전남은 연계 수준

북극항로에 여수·광양항 ‘벌크·에너지 화물’ 포함돼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신)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남부 해양수도권’ 정책과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부산·울산·경남뿐 아니라 전남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초광역 해양경제권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할과 지원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수출입 물동량은 광양항 2억1500만t으로 울산항 1억7,200만t, 부산항 1억6,200만t보다 많다. 여수·광양항은 원유 약 130만㎥, LNG 약 193만㎥의 대규모 저장시설을 갖추고 석유화학·철강·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물류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남부 해양수도권 구상은 부산을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 울산을 친환경 에너지 허브, 경남을 글로벌 공급망 거점으로 설정한 반면, 전남은 북극항로 경제권역 및 남부 해양레저관광권과의 연계 수준에 머물러 지역별 역할과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여수·광양항을 현재 수립 중인 ‘항만별 발전전략’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개별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북극항로 활성화·글로벌 공급망 재편·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전략은 차원이 다르다. 특히 북극항로 사업도 부산항을 거점으로 한 컨테이너 운송, 진해신항 조성, 울산항 친환경경연로 저장·방커링 등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여수·광양항의 강점인 철광석·원유·LNG



등 벌크·에너지 화물 운송모형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 있다. 문금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남부 해양수도권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이라면 부산에 한정된 법·재정 지원체계로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부산·울산·경남·전남을 포괄하는 초광역 지원법 체계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15억t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여수·광양항을 남부 해양수도권의 주변부로 둘 이유가 없다”며 “부산·울산·경남·전남 각각의 항만·에너지·산업·수산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걸맞은 예산과 인프라 투자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남을 수산업 현대화와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고,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의 벌크·에너지 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초광역 해양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김밥·천일염으로 맛낸 축제…여수에 사흘간 12만명

세계 김밥&소금 페스티벌 폐막·체험·공연·수산물 판매 연계

전남광주의 김과 천일염을 먹거리와 체험으로 풀어낸 ‘2026 전남광주 세계 김밥&소금 페스티벌’이 사흘간 관람객 12만명을 모으며 막을 내렸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9~11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가족 단위 방문객 등 12만명이 다녀갔다. 축제는 지역 대표 수산물인 김과 천일염을 K-푸드 콘텐츠와 연결해 전시부터 체험, 공연, 판매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장은 김밥존과 천일염존, 공연존, 마켓존, 힐링존 등으

로 나뉘 운영됐다. 김밥존에서는 김의 역사를 살펴보는 전시와 아트김밥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천일염존에는 천일염의 역사와 가치를 소개하는 역사관이 마련돼 일대에서 접하는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지역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존과 공연·휴식공간도 함께 운영됐다.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본 뒤 직접 음식을 만들고 맛보거나 공연을 즐기며 행사장에 머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했다. 손영권 통합특별시 수산유통가공과장은 “김 한



지난 9~11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전남광주 세계 김밥&소금 페스티벌’.

장과 소금 한 알에 담긴 가치와 이야기를 알리고, 직접 맛보고 즐길 경험이 지역 수산물 소비와 전남광주 방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국회 AI 미래전환’ 이달 출범…“새 성장모델 만든다”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임문영 주도…국회의원 35명 참여

국회에서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과 미래 사회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미래전환’이 이르면 이번 달에 출범한다. ‘국회 AI 미래전환’은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사진)이 대표위원을 맡고 국회의원 35명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참여한다. AI가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민의 일상과 미래를 좌우할 의제로 떠오르면서 다수의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참여해 AI 대전환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드러냈다. 특히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임문영 의원은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이 단체의 입법과 정책 활동을 이끌어 갈 전망이다. 임 의원은 AI 국가전략과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뿐 아니라 AI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단체의 핵심 연구주제는 ‘AI 대전환 시대의 사회경제 모델과 지속가능한 풍요(Sustainable Abundance)’다. AI가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자리와 교육, 복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모델과 사회 시스템을 연구하고, 이를 구체적인 입법·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AI는 이미 제조업과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헬스 등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노동의 형태와 교육체계, 공공서비스의 제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운 성장과 기회인 동시에 일자리 구조



변화와 소득 격차, 기술 접근성에 따른 불평등 등 새로운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AI 미래전환’은 AI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넘어, AI가 창출하는 부와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어떻게 국민 모두의 삶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 의원은 “AI는 단순히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라며 “AI 국가전략을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국회에서 AI가 가져올 미래를 준비하고 그 변화를 뒷받침할 입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통해 경제는 성장하는데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AI 대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많은 동료 의원이 뜻을 모아주시길 만큼, AI 기술혁신과 사회적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AI 미래전환에는 △정회원으로 임문영, 김성범(책임연구위원), 김태연, 백예련, 전현희, 박균배, 김남준, 오세희, 전은수, 차규근(조국혁신당), 김종민(무소속) 의원과 △준회원으로 문대림, 손명수, 모경중, 황정아, 박선원, 이주희, 부승찬, 한민수, 김현정, 윤준병, 박민규, 박희승, 김남규, 어기규, 문금주, 김윤, 김승원, 권형영, 서미화, 김영배, 이재강, 김병주, 송재복, 전진숙 의원이 함께 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지역주도 성장 성과 ‘주민 삶’으로 증명하겠다”

박정현, 제3대 지방시대위원장 취임식서 의지 밝혀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사진)은 12일 “지역에서 쌓은 경험을 국가 균형성장으로 이어가고, 주민의 삶에서 지방시대의 성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대 지방시대위원장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민주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계승하고, ‘5국3특’을 지역의 기회로 만들며, 현장의 문제를 국가의 해법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권한·재정을 뒷받침하고, 산업의 성과를 주민의 소득·일자리와 생활 여건 개선폰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균형성장의 의미를 보여주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 위원장은 충청남도 정부부지사와 부여군수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사람의 삶을 든든하게 하는 일이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일임을 배웠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심 도시와 주변 시·군,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고, 기초 지방정부와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의 철학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착과 주민의 의료·돌봄을 뒷받침하는 등 산업과 생활 정책을 연결해 삶의 안정과 지역의 성장이 서로를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일자리와 소득, 생활 여건, 청년의 정착 기회를 정책의 성과로 확인하겠다”며 “우리의 균형성장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변화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